

노무현 · ‘열린 한나라당’의 개악 질주

■ 국민연금 개악 ■ 사학법 개악 ■ 비정규직 확대 시행령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 한미FTA 체결 추진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친노 무현 언론의 선봉이 된 <조선일보>는 노무현의 개헌 철회를 칭찬하며 온갖 개악을 추진할 “호기로 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무현과 한나라당 · 조중동의 개악 공조는 국민연금 개악과 사학법 개악 야합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악과 한미FTA 체결 · 비준까지 이어질 듯하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용돈’ 개악과 ‘부패 사학과 보수 종단을 위한’ 사학법 개악을 뒷거래하며 야합했다. 이미 누더기 ‘개혁’이던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마저 꺾대기가 될 판이다. 이들이 지난 연말에 개악 공조한 결과물인 비정규직 악법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더욱 파괴적인 비정규직 확대 ·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은 똑같이 부패한 자들이기도 하다. 최근 한나라당이 안산 지역 4 · 25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역대 ‘공천 장사’를 한 것이 밝혀졌다. 선거법 위반 유권자에 대한 강제성의 과태료 대납 사건도 여전한 ‘차떼기 습성’을 보여 줬다.

한편, 전 검찰총장 송광수는 노무현의 불법 대선자금에 밝혀진 것 이상이라고 폭로했다. 청와대가 협박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막은 것도 폭로했다. 행방을 알 수 없던 삼성 채권 5백억 원의 일부가 노무현에게 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처럼 부패한 우익과 다를



바 없는 짓을 해 온 사기꾼들은 살아남으려 발버둥치고 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의 지적처럼 “옛날 제품을 섞어 만든 것에 새로운 겹포장을 하겠다는” 이들의 시도는 곳곳에서 뼈저리게 고인다.

립스틱 바른 돼지

국민중심당은 통합신당준비모임과 민주당이 주도한 ‘소통합’이 “열우당 이종대로 보일지 모른다”며 동참을 거부했다. 상대방이 ‘국고보조금만 먹고 똥지 모른다’는 의심과 ‘도로민주당’이 될 거라는 걱정 속에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의 ‘소통합’마저 실패했다.

물론 한미FTA 반대로 어느 정도 차별성을 보여 준 천정배와 김

근태의 연합은 전진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대를 지지해 온 이들이 일관된 반신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볼 근거는 별로 없다. 더구나 이들도 민주당과 열우당 야류들을 포함한 ‘대통합’에 미련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볼 때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립스틱 바른 돼지’가 아닌가”(손혁재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하는 의심은 계속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반사이익도 여전히 불안정하다. 예컨대 YTN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의 지지율은 14퍼센트나 떨어졌고 대신 무응답층이 16퍼센트 늘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아귀다툼 속에서 이명박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거품은 계속 빠질 것이고 4 · 25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재보선 불패 기록’도 깨질 듯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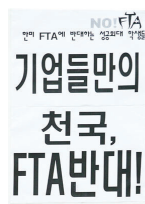
불안감 때문에 한나라당은 쫓불 집회 금지, 선거 관련 단어 검색어 채택 금지 등 유권자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 반민주적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친미 독재의 후예라는 이미지가 더 굳어지는 역효과만 났다.

낡은 이미지를 탈색하려는 대북정책 ‘변화’ 시도도 쉽지 않다. “당의 간판을 내리자는 거냐”는 김용갑 류의 반발도 있지만, 그래 봐야 “초식과 육식을 섞다가 광우병 걸린다”는 비아냥만 사고 있는 것이다.

주류 정치권의 위기와 개악 공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개악 반대 투쟁과 정치 대안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국민용돈’으로
만들려는 개악야합

3면



한미FTA
반대 운동

- 한미FTA 반대는 왜국론인가?
-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 한-EU FTA

4,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평가

5면

안토니오 그람시
사망 70주년 기념

6,7면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보여준 것

8면

정성진 칼럼
-사회적 자본 이론 비판

11면

비정규직 확대 시행령을
저지하라

12면

www.counterfire.or.kr

<맞불> 온라인 기사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의 교훈
LOR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사표 방지’ 심리가 가슴을 부리며 급진 좌파의 표를 깎아 먹었다. LOR과 급진 좌파는 이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아시아계’는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고가 난 후 하루 종일 들려 온 단어였다. … 모든 아시아계 사람들은 긴장했다. … ‘제발 다른 아시아국 출신이기를!’ 이것이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회에서 나오는 기도였다.”

— 미국의 언론인 앤드류 램

“이 나라 이 민족이 배은망덕한 일을 저질렀다.”

— 우익이 주최한 ‘버지니아 사건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울먹이는 목사 최해일

“한국과 한국인을 대신해 유감과 사죄를 표한다. 사죄를 위해 한국 교민들이 32일간 금식하자.”

— 주미대사 이태식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기념관 운운하는 것은 년센스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먼저 세워야 한다.”

— 한나라당 의원 홍준표

“노 대통령이 당시 ‘내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을 더 썼다면 그만 두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검찰이 10분의 2, 10분의 3을 찾아냈다. 그러자 측근들에게서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손을 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 2003년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전 검찰총장 송광수의 증언

“예전에 나는 높으신 교수님들이나 교직원 분들만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노조하고 보니까 ‘아, 나도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김순자 지부장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외대 당국

최근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외대노조 파업 당시 외대 용인 캠퍼스 학생처장 이영태가 파업 중인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덧붙여 해당 교수에게 ‘특별 인권 교육’을 받을 것과 총장에게는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조명훈 동지는 보직 교수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성희롱하고 폭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외대 당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조명훈 동지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은 외대 당국의 징계 사유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조명훈 동지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입증해 준다.

지성

그러나 외대 당국은 조명훈 동지 징계를 반복하거나 철회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이에 ‘조명훈학우징계철회대책위원회(이하 징계대책위)’는 4월 20일 외대 개교기념일 행사장에서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팻말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기념식장에 나타난 성희롱 가해 교수 이영태는 시위에 참가한 성희롱 피해 여성 노동자에게 달려들어 팻말을 완력으로 빼앗아 부러뜨리며 위협을 가했다! 조명훈 동지가 이런 만



4월 20일 개교기념식장 앞 팻말시위

행에 항의하려 하자 옆에 있던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장봉익은 조명훈 동지를 들어서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개쳐 버렸다!

최고의 지성이라는 대학 교수들이 성희롱과 폭력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던 학생처장 장봉익은 조명훈 동지에게 내린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

기는커녕 폭행까지 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외대 당국의 몰상식과 야만적 행태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외대 당국은 당장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 여성 노동자와 조명훈 동지에게 사죄해야 한다. 조명훈 동지 징계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징계받아 마땅한 것은 성희롱과 폭력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 교

수들이다.

반인권적 외대 당국에 맞서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조명훈 동지와 징계대책위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양재우

징계 철회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금은 대자보와 유인물 제작, 법정 소송 등에 사용됩니다.

제일은행 132-20-661393(여승주)

언론노조 회계 부정 사건이 보여 준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전임 집행부 시절에 조합비 3억 3천만 원의 개인 횡령과 1억 5천만 원의 회계 부정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이름을 더럽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관련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러나 ‘차떼기’ 한나라당이 “도덕적 파탄” 운운하는 것은 역겹기 그지없다. <조선일보>가 “본연의 노동운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짐짓 훈계하는 것도 그렇다. 이들은 온갖 어마어마한 부패·비리·탈세의 장본인들이고, 노동운동을 타락과 부패로 이끌려고 애써 온 자들이다.

이들은 이 사건을 이용해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온건하게 길들이려 한다. 그래서 엉뚱하게 노조의 “좌파적 정치 구호”와 “정치·이념 운동”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현장조합원의 통제에서 벗어난 노조 간부들의 보수화와 그들 일부의 일탈이다. 현장조합원의 견제 구조가 취약한 한국노총이나 우파 노조 지도부에서 노조 간부 비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에도 3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언론노조 간부는 무려 20년 동안 상근간부로 일하며 현장의 정서나 통제와 멀어져 왔고, “한 해에 고작 두 시간”이었다는 부실한 회계감사는 일탈을 부추겼다. 이런 구조에서 노조 간부가 조합비를 멋대로 무이자 대출해 쓰는 문제도 발생했다.

악법

조합비의 일부가 정상적 회계 처리 없이 민주노동당에 전달됐다는 비판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검은 돈거래”라고 비난하

지만 노동자들이 낸 조합비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정치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일이다. 오히려 이것을 가로막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악법이다.

아마도 악법 때문에 정상적 회계 처리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악법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싸울 필요가 있다.

언론노조 신임 이준안 지도부가 이 사안을 먼저 보수 언론에 터뜨리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유감스럽다. 검찰은 불공정한 친기업주 편향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미 뉴라이트 성향이라는 의심을 받아 온 이준안 지도부가 이 사안을 진지하게 해결하기보다 좌파를 흠집내며 지도권 다툼에 이용하려 한다는 설득력있는 우려도 있다.

노조 간부 비리를 해결하려면 현장 노동자들이 노조 간부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노조 간부들이 언제든지 조합원에게 소환될 수 있어야 하고, 현장조합원이 통제하는 회계감사 제도가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주요 결정도 현장조합원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현장조합원들의 참여와 주도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운동은 마땅히 사회 진보와 변혁을 위한 ‘좌파적 정치·이념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전지윤

바로잡습니다

<맞붙> 40호 7면 두번째 문단에서 “이것은 탄화수소 산업을 … 제기한다”는 문장은 “이것은 탄화수소 산업을 렘슬YFF나 페트로브라스 같은 외국의 다국적기업들한테서 빼앗았을 때 … 제기한다”는 문장의 오역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오역을 지적해 준 이종길 동지에게 감사드립니다.

연금 대신 ‘용돈’ 받으라는 더러운 야합

장호중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안을 지지하는 척하며 열우당을 ‘압박’하던 한나라당이 아니나다를까 불과 닷새 만에 열우당과의 ‘밀실 야합’으로 최악의 국민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열린 한나라당’의 이번 타협안은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연금 지급액을 40퍼센트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새로 도입하겠다는 기초연금을 합치더라도 연금 지급액이 지금보다 4분의 1이나 줄어든다.

전체 연금 가입자의 60퍼센트가 최저 생계비(월 43만 5천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 50만 원 미만 빈민들에게만, 그것도 한 달에 고작 8만 원만 지급할 것이다. 앞으로 20년 뒤에나 이 기초연금을 10퍼센트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재정 마련 방안도 없는 못 믿을 약속이다.

위낙 형편없는 개악안이라 조종동 같은 보수 언론들조차 “‘용돈 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만 하다”며 우려했다. 물론 “이젠 공무원연금 차례”라는 조연도 있지 않았다.(<조선일보> 4월 21일치 사설)

재정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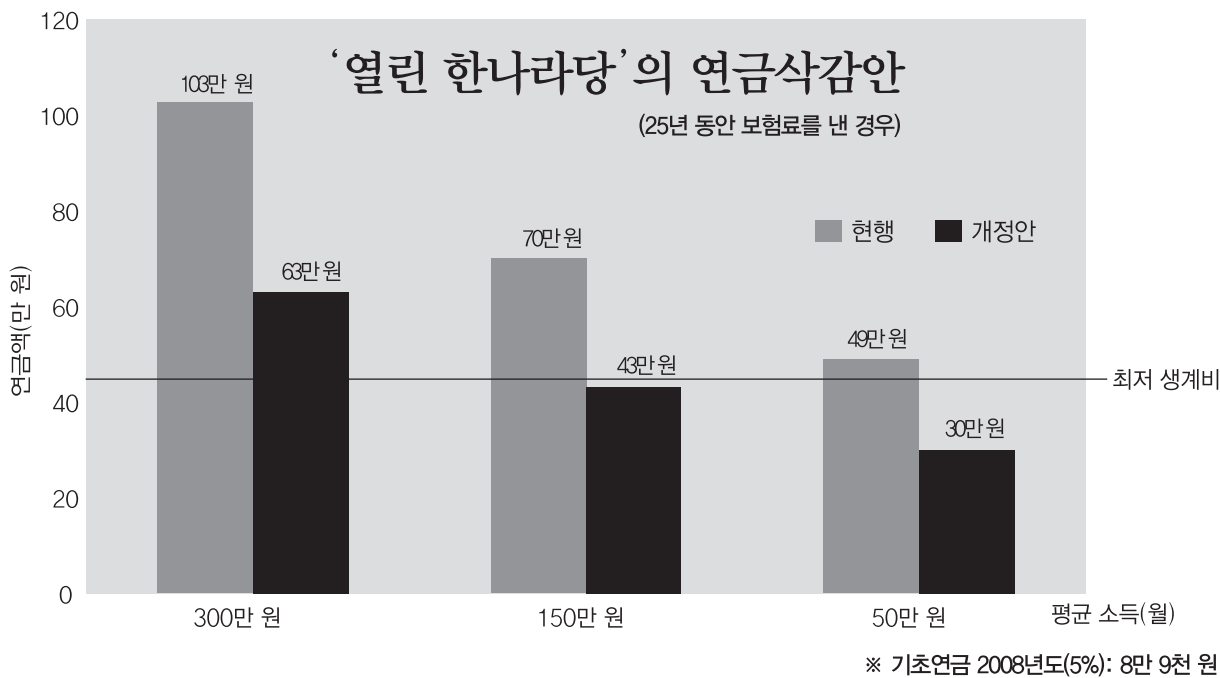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연금 ‘개혁’을 추진한 명분은 ‘재정 안정화’이다. 그러나 이 ‘재정 안정화’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진정한 취지인 노동자·서민의 노후 안정화다. 젊어서는 비정규직으로 살다가 노후에는 연금 한 톨 못 받는 사람이 5백만 명이 넘는데도, 주류 정치인들은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정부 재정을 보충할 ‘연기금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고 우긴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20년이 되는 2008년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쌓여가던 기금 적립률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된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도 이들은 재정 안정 운운하며 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또,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연금 기금 수백조 원을 쌓아두면서도 연금 지급액을 대폭 낮춰 수많은 노동자들을 값비싼 사보험 시장으로 내몰려 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보험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하는 국내 주요 보험회사들과 다국적 보험회사들이 한국 정부에 국민연금 개악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들의 우선순위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주식, 채권, 부동산, 기금, 보험업, 시장



같은 것들보다 한참 아래에 놓여 있다.

노동자·서민의 노후를 위한 진정한 ‘재정 안정화’는 연금을 삭감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선 절대 이룰 수 없다. ‘정규직 고소득’ 노동자들조차 ‘현재의’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를 대기에다 빼듯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삭감

이런 상태에서는 노동자들한테서 보험료를 거둬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한 넉넉한 연금은 꿈도 꿀 수 없다. 보험료와 연금 중 어느 쪽을 올리거나 낮추더라도 현재와 미래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 희생이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아니라 기

업주 등 부유층이 소유한 거대한 부를 동원해야 근본적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기업주·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거두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누진율을 높여 그 돈으로 노동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면 재정 안정화와 노후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문제는 기업주·부자 등이 이런 정책에 격렬히 저항할 뿐 아니라 정부와 주류 정당들이 이들의 이익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저항을 실질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자들의 대중시위와 파업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현장조합원 활동가들이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 건설에 나설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에 반대해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을 규탄하며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는 올바른 결정이다. 당 지도부는 한미FTA 반대 투쟁을 열심히 건설한 것처럼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의원단의 철야농성이 호소력을 갖게 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게 하려면 심하게 훼손된 민주노동당의 연금 개혁안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의 연금 개혁안은 연금 삭감 반대, 국민연금 기금 운영 민주화, 무기여 기초연금 도입, 노동자 보험료 전액 기업주 부담 등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급진적이고 올바른 민주노동당의 연금 대안은 지금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민주노동

당 지도부는 연금 삭감에 동의했고 보험료 인상에도 동의했다. 기초연금 도입을 요구했지만 앞선 후퇴가 너무 커서 꺾이졌다. 기초연금 액수도 계속 줄어 왔다. 일부에서는 ‘사회현대전략’ 같은 노동자 양보론까지 추진했다.

그렇게 후퇴하고 타협했건만 열우당과 한나라당에게 이용당하기만 하고 뒤통수만 맞았다. ‘닭 쫓다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오건호 정책전문위원 등은 애초의 민주노동당 연금 개혁안이 ‘비현실적이라서 국회에선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마도 이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9명의 힘만으로 연금 개악을 막고 진정한 연금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다.

진정한 문제는 이런 과제를 의회 안에

서 의원들의 ‘협상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본 의회주의적 태도에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열우당·한나라당과 공조하며 이들이 ‘현실적’이라고 여길 만한 후퇴를 거듭해 왔다. 지난 비정규직 수정안에서 그랬듯이 말이다.

‘현실적’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처음부터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운동을 진지하게 건설해야 했다. 또, 이미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선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고무해야 했다. 의회 안 활동은 이런 대중행동 건설과 연결돼야 했다.

2004년에만 해도 열악한 연금 체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안티 국민연금’ 운동이 벌어졌을 정도로 연금에 대한 대

중의 관심이 높았다. 다만 정부의 거짓말과 이 거짓말에 바탕을 둔 개악안 때문에 사람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조직노동자들의 행동을 호소했다면 후퇴는 불가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후퇴를 거듭하며 이런 후퇴를 비판하는 당내 의견을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무시하고 논쟁을 회피했다.

열린 한나라당의 개악 야합에 뒤통수를 맞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제 오류를 바로잡으며 단호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기초연금 도입도 중요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개악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한미FTA 반대는 쇄국론인가?

강동훈

[편집자] 한미FTA를 타결하려고 노무현이 나서서 미국에 약속했던 쇄고기 수입이 시작됐다. 덕분에 국민의 건강은 위태롭게 됐다. 게다가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모니터로만 볼 수 있게 하고, 그것도 20명의 감시 아래 필기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협정문을 공개했다고 생색내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미FTA 반대 운동에 많이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뤘다.

노무현 정부는 “개방만이 살 길”이라며 한미FTA 체결 추진을 정당화한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고 곧 “쇄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고립된다는 말은 황당한 주장이다.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세계시장에 충분히 개방돼 있다. 미국 케이트(CATO) 연구소는 2003년에 한국의 경제개방도가 1백23국 가운데 일본·노르웨이와 같은 26위라고 밝혔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도 40퍼센트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론스타가 ‘떡튀’로 무려 4조 5천억 원의 차익을 얻기 직전이고, 뉴브리지캐피탈은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 1천5백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나는 등 자본시장도 개방돼 있다.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70퍼센트로 OECD 평균 대외의존도(GDP(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수입량) 50퍼센트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22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미FTA 반대 운동이 쇄국론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흑색선전이다. 물론 한미FTA 반대 운동의 일부가 ‘자립경제’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고립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

반대 운동 진영의 일부가 한미FTA 자체가 아니라 졸속성이나 불공정성을 비판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제적 운동이다

는 것이나, 또 다른 일부가 동아시아 경제블록 등을 구상하며 한중FTA 우선 체결을 주장하는 것만 봐도 반대 운동 진영이 쇄국을 지지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함께’를 비롯한 급진 좌파들도 세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적 기업 세계화에 반대한다.

대안세계화 운동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은 ‘대안세계화 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이미 세계적 차원의 국제적 운동이다.

그런데도 노무현과 우파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쇄국”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세계 경제에서 뒤처지고 그나마 계속되는 경제 성장마저 멈추면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대중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노무현과 한국 지배계급 대다수가 절대선으로 믿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만이 경제를 성장시킬 방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1980년대 이래 점차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됐지만, 1990년대 내내 유럽연합의 성장은 정체했고 미국에서는 클린턴의 ‘신경제’ 호황 이후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은 부동산 거품에 의존해 근근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제3세계도 총 연간성장률은 1961~80년에 5.5퍼센트에서 1981~99년에 2.6퍼센트로 하락했다. 중국만이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은 1990년대 말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설사 한미FTA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대중이 그 혜택을 볼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배자들이 한미FTA에서 노리는 핵심은 바로 ‘구조조정’이기 때문이다.

IMF 이후 수출 증대로 기업들의 이윤은 크게 늘었지만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화로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 한미FTA의 미래를 잘 보여 준다.

노무현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얘기하며 ‘선진 경영기법 도입’ 운운한다. 그러나 론스타가 선보인 선진 경영기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리하고 통보하기’였다.

이마트

또, 다국적기업 월마트를 물리친 ‘토종’ 이마트가 ‘선진’ 경영의 예로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마트가 월마트를 물리친 ‘경영 노하우’는 비정규직 양산과 삼성에서 이어져 온 노조 말살 정책이다. 대형 할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70~80퍼센트가 비정규직이고 한 달 임금은 대부분 60만~1백만 원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2백40만 원의 절반도 안 된다.

따라서 FTA 논쟁의 핵심은 대중의 삶을 자본의 이윤 추구에 개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우리는 세계적 생산 체계를 이용하면서도, 대중의 필요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 추구만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는 다른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빈세’ 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을 통제하고, 핵심 경제 부문을 국유화하고, 부유세와 같은 누진세를 도입해 사회복지 제도를 확장하는 조치 등은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시장 경쟁의 무계획성에 내맡기지 않고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대중이 참여해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경제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가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노무현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한미FTA로 수출 확대와 함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선전한다.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로 자동차나 쇄고기,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을 한미FTA 지지로 이끌 어내려는 알박한 수작이다.

물론 자동차나 농산물 등 몇몇 상품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의약품 협상 결과로 약값이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져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사람들은 사보험에 더 많이 의지해야 할 것이다. 공공 서비스에서 ‘상업적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오르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교육비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서비스 가격 인상은 일부 상품들의 가격 인하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의 주식인 ‘포르피야’의 가격은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70퍼센트나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5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옥수수의 유통을 독점한 미국계 초국적 유통업자들이 담합해 가격을 올린 탓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옥수수

게다가 농산물이 싸지는 것은 광우병 위험이나 유전자 조작 식품의 수입 규제 완화에서 보듯이 식품 검역을 완화해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인

데, 이런 위험은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세금 감면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줄어드는 세금을 어디선가 메워야 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내야 한다.

자동차 특소세 감면이나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에서 보듯 세금 인하 혜택은 더 비싼 차를 사용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그 세금 감소분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세금을 내는 주행세를 늘려 메우려 한다.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해 환경 오염 피해도 더 커지게 됐다.

특히, 소비자 후생이 커진다는 주장은

한미FTA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대중이 겪을 피해를 쏙 빼놓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생산자이기도 하다. 생산자로서 수입을 얻지 못하면 소비할 수 없다.

한미FTA로 농업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많은 농민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다. 늘어난 실업자는 비정규직화의 핑계로 이용될 것이고 임금 삭감 압력도 커질 것이다. 결국 소득이 줄어들면 상품이 싸지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조선일보〉도 한미FTA로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더 깊숙이 편입하면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넘어서 ‘일자리를 잃는 성장’(Jobloss growth)”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마디로 한미FTA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완전한 조삼모사 식 주장인 셈이다.

국내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것 -

LCR의 브장스노가 좋은 성적을 거두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4월 22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사람들은 5년 전 악몽에 시달렸다. 2002년 4월 21일[대선 1차 투표에서] 나찌 지도자 장-마리 르펜이 사회당 총리 리오넬 조스팽을 3위로 밀어내고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르펜은 망신당했다. 그의 득표율은 11퍼센트도 되지 않았다. 25퍼센트 이상 득표한 사회당 후보 세골렌 루아얄이 5월 6일 결선 투표에서 우파 집권당 후보 니콜라 사르코지와 맞붙을 것이다.

프랑스의 중도좌파 일간지 <르몽드>는 “정치가 [2002년] 4월 21일에 대한 복수를 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르펜의 득표율이 하락한 것은 사르코지가 치안과 이민 쟁점에서 르펜의 사악한 우익 정책을 베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르코지는 약 31퍼센트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자크 시라크가 대통령이 된 이후 12년 간 우파가 집권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시라크 집권기 동안 경제가 지지부진하고 부패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루아얄이 겨우 2위를 차지한 것은 그녀와 사회당에 대한 유죄 선고나 마찬가지다.

루아얄은 처음에 청년 범죄자들을 군대에 징집하라고 요구하는 등 토니 블레어를 본뜬 선거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사르코지를 꺾기 위해, 그리고 전통적 사회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최근 몇 주 동안 약간 왼쪽으로 이동했다.

사실, 재계의 가장 확고한 지지를 받은 두 후보인 사르코지와 중도우파 후보 프랑수아 베이루를 포함해 주요 후보들이 모두 영미식 자유시장 정책들과 거리를 두려 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너무 높게 유지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비판받았다.

그럼에도 주류 언론의 정치 평론가들은 2005년 5월 신자유주의적 유럽헌법의 충격적 패배 후 프랑스 정치가 드디어



브장스노의 대중 강연회는 언제나 성황이었다 - 3월 28일 프랑스 소도시 발랑스에서 열린 브장스노 강연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이것은 딱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격이다.

2002년 대선 때는 1차 투표에서 16명의 후보가 난립해 표가 크게 분산됐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주류 정치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시라크·조스팽이라는 두 주요 후보에 대한 냉담함의 표현이었다. 거의 30퍼센트의 유권자들이 아예 기권했다.

사표 방지

그러나 이번에는 2002년 4월 21일의 기억과 사르코지의 공세적 우파 정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표율이 거의 85퍼센트까지 육박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군소 후보들은 좌파든 우파든 사표 방지 압력을 크게 받아 득표율이 떨어졌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의 올리비에 브

장스노가 4퍼센트 이상을 득표하며 5위를 기록한 것이다.

좌파 유권자들이 사르코지와 르펜을 막으려면 “사표 방지”를 위해 루아얄이나 심지어 베이루를 지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에 시달린 것을 감안하면, 브장스노의 득표는 대단한 성과다. 이는 프랑스 전역을 순회하면서 열정적인 대중 집회를 열며 선거 운동을 한 결과다.

브장스노는 공산당의 마리-조르주 뷔페, 노동자투쟁(LO)의 아를레트 라기에르, 반자본주의 운동가 조제 보베를 훨씬 앞섰다. 보베는 유럽헌법 반대 운동을 주도한 연대체 일부의 이른바 반신자유주의 “단일” 후보인데, 1.32퍼센트를 얻었다.

한편, 루아얄을 지지해야 한다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급진 좌파는 총 9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는 2002년보다 5퍼센트 정도 낮은 것이지만,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 준다.

<르몽드>는 “LCR이 반신자유주의 좌파 지도자로 확실히 자리잡았다”고 인정했다. LCR은 사회당 왼쪽에 있는 좌파들의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강력하고 단결된 급진 좌파 진영을 건설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는 미래의 과제다. 당장은 1974년 이후 우파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르코지를 물리쳐야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결선 투표에서 사르코지가 루아얄을 훨씬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브장스노는 자신에게 투표한 1백60만 명에게 결선 투표를 “사르코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가하는 반사르코지 국민투표”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중요한 것은 세골렌 루아얄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니콜라 사르코지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브장스노와 그의 동지들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며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한-EU FTA도 신자유주의 협정이다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 만에 노무현 정부는 유럽연합(EU)과 포괄적 FTA 추진을 시작했다. 한미FTA로도 모자라 계속 ‘외부 쇼크’를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실패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진보적’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FTA와 다르겠지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한-EU FTA도 신자유주의 협정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EU의 통상장관 피터 맨델슨은 지난 4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EU와 한국은 비슷한 분야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 타결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상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투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는 것이 목적

이라고 말했다.

한-EU FTA 협상 EU측 수석대표로 내정된 가르시아 베르세로는 의약품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한미FTA와 동등한 수준의 의약품 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유럽헌법

유럽 자동차업체들은 이른바 ‘환경 강국’이라는 EU의 명성이 무색하게 배기가스 자가진단 장치 설치 의무화의 유예를 요구할 것이다.

결국 한미FTA 협상과 마찬가지로 공공 서비스와 대중의 보건과 환경 보호 문제가 다시 한 번 FTA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EU 지배자들의 진정한 실체를 안다면 이 건 뜻밖의 일이 아니다. 지금 EU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세계에 퍼뜨리는 주요 행위자 중 하나다.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강제해 복지예산 축소를 압박했다. 2005년 부결된 유럽헌법에는 “무제한적인 자유 시장 경쟁”이 필요하다는 구절이 있다. 최근에는 “노동법 현대화”라는 미사여구 아래 노동조건 악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유럽헌법 부결 운동 등 대중적 반대에 부딪히자 이제는 똑같은 내용을

비민주적 국제 통상협정을 통해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물론 EU가 FTA를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지부진한 WTO 협상을 대신해 FTA를 시장개방용 무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FTA는 공공 서비스 사유화를 포함해 유럽헌법이 담으려 한 각종 정책들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무현은 “한-EU FTA는 국내 반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한-EU FTA의 의제인 공공 서비스, 건강권, 환경 문제 등은 유럽과 한국의 노동자·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한미FTA에 반대한 광범한 단체들은 똑같이 신자유주의 협정인 한-EU FTA에도 반대해야 한다. 이는 유럽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고무할 것이다. 한국 진보진영은 노무현의 기대를 헛되게 만들 구체적 반대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김용욱

안토니오 그람시의 혁명적 유산

[편집자] 4월 27일은 이탈리아 맑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죽은 지 70주년 되는 날이다.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크리스 뱌머리가 2005년에 쓴 글들을 모아 번역한 것이다.

모순을 드러내 보여 주는 철학

흔히들 철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위대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 온 영원한 진실이 철학이라는 것이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철학이 그 시대의 문제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역사적·사회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당대의 사고방식을 사용해 당대의 문제들에 답변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것이다.

철학은 특정 사회의 사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다. 그람시가 볼 때 우리는 모두 철학자다. 우리의 문

화·종교·민속뿐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일상 생활 상식 등 모든 것이 특정 세계관을 담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 유력한 사상은 걸러지고 파편화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것으로, 흔히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처음에 표현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람시가 보기에, 똑같은 노동자가 온갖 인종차별·성차별 사상을 드러내는 “걸어다니는 화석, 시

대착오적 인물”임과 동시에 결코 피캣라인을 넘지 않는[파업 때 사용자 편으로 넘어가지 않는] 충성스런 노동조합원일 수 있다.

대중적 의식은 “석기 시대의 요소들과 첨단 과학의 원리들, 지역 수준의 과거 역사의 모든 단계에서 비롯한 편견들과 미래 철학—세계적으로 결속된 인류의 철학이 될—의 직관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람시는 1919년 20년 혁명적 시기에 토리노 노동계급 투쟁에 참가한 자신의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냈다. 모순적 의식이 섞여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

동계급이 그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율적 세력이 아닌 이윤을 설명해 준다.

대중적 의식에서 혁명적 의식으로의 발전은 끊임없는 단선적 과정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말과 모순되게 행동할 수 있다. 생각과 행동의 이런 차이가 대중적 의식의 핵심적 모순이다. 노동자들은 유력한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면서도 자생적으로 반격할 수 있다.

상식과 양식

그람시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노동자]가 두 가지 이론적 의식(또는 하나의 모순적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그의 행동에 합축돼 있고, 현실 세계의

실천적 변혁 과정에서 그와 동료 노동자들을 단결시켜 주는 의식이다. 다른 하나는 겉보기에 명백하거나 말로 드러난, 그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다.”

가장 중요한 모순은 노동자가 받아들이는 세계관과 그가 투쟁 속에서 경험한 현실 사이의 모순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계급의식을 양성하게 되고, 지배계급의 권력과 반대편에 서게 된다. 이것은 “상식”에서 엄청난 발전한 “양식(良識)”이다.

이것은 두번째 더 높은 단계, 즉 부분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공통의 계급 정체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세번째 계기는 자신의 집단적 이해관계가 순전히 경제적인

계급의 집단적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위집단들의 이해관계도 될 수 있고 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이다.”

“이것은 가장 순수하게 정치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에 싹트기 시작한 이데올로기들이 ‘정당’을 형성하고, 서로 대립하고 충돌해서 그 중 오직 하나만 유력하게 된다.

“이것은 경제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의 조화뿐 아니라 지적·도덕적 통일성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보편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투쟁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제기한다. 그래서 다양한 하위 집단들에 대한 근본적 사회 집단의 해계모니를 창출한다.”

그람시는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혁명에는 열성적인 비판 활동의 오랜 과정, 새로운 문화적 통찰과 사상의

확산 과정이 선행했다. 그런 사상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이다.”

그람시는 혁명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계급이 많은 복잡한 사명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라고 모든 노동자 대중에게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당원들에게는 그렇게 요구해야 한다. 당은 전체로서 이 더 높은 의식을 나타낼 수 있고 나타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은 노동자 대중을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다닐 것이다. 따라서 당은 맑스주의를 흡수해야 한다.”

당과 당의 사상은 일상의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현대의 이론[맑스주의]은 대중의 ‘자생적’ 정서에 반대할 수 없다. 전자는 후자로 바뀔 수 있어야 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국가, 동의, 진지전

맑스주의에 대한 흔한 비판은 맑스주의가 경제 결정론이고, 이데올로기를 조야하게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때 옛 소련과 중국을 지배한 공식 ‘맑스주의’를 반영한다. 공식 ‘맑스주의’는 노동자들이 허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당(공산당)의 지도를 따라 진정한 계급의식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탈리아 맑스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칼 맑스의 이데올로기 분석을 발전시켰다. 그람시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독재정권 치하 감옥이라는 끔찍한 조건에서 그런 작업을 했다.

그람시를 재판한 판사는 선고 결정문에서 “이 자의 두뇌를 20년 동안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도는 실패했다. 그람시는 감옥에서 많은 글을 썼다. 그러나 검열 때문에 빙빙 돌려서 글을 써야 했다.

그람시가 가장 먼저 다룬 문제는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서유럽을 휩쓴 혁명적 격변의 실패였다. 이탈리아는 조건이 러시아와 가장 비슷한 나라였고, 그람시는 1919년 20년의 “붉은 2년” 동안 토리노 노동계급의 투쟁에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 토리노는 이탈리아의 대규모 공업 중심지였다.

그람시는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들인 레닌과 트로츠키가 서유럽과 동유럽의 차이에 대해 주장한 바를 발전시켰다.

그람시는 지배계급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반(半)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지배계급은 국가의 강제력뿐 아니라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통해서도 지배한다.

짜르 치하 러시아에서는 시민사회가 막 생겨나고 있었다. 그 시민사회는 “원시적이고 켈라틴[아교]과 비슷한” 상태였다. 러시아에서는 국가의 강제력이 압도적이었다.

혁명가들의 과제는 기회가 왔을 때 국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람시는 이것을 “기동전”이라고 불렀다.

서유럽에서는 지배계급이 대부분의 시기에 [피지배계급의] 동의에 의존했고, 시민사회 내에 다양한 기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기구들은 거대한 요새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방벽 구실을 했다.

그람시에 따르면, 그런 기구들과 그런 기구들이 사회 전체에 퍼뜨리는 사상을 무너뜨리려면 직접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오랜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여야 한다. 혁명정당은 노동계급과 다른 파업약 집단들에 대한 지도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람시는 이를 “진지전”이라고 불렀다.

붉은 2년

그람시는 “진지전”이 투쟁, 즉 노동계급 내에서 “유기적 지식인들”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일상의 사상 투쟁을 포함한다고 봤다. 이 “유기적 지식인들”은 노동계급의 필수적 일부로서 노동계급과 관계 맺고 있는 혁명적 노동자들이다.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 국가는 탄압과 동의에 의존해 지배했다. 그람시는 국가가 서유럽에서 더 강력하고 압박을 받으면 [동유럽에서보다] 더 강력한 적이 될 것이



계급, 이데올로기, 서유럽 혁명

그람시는 사상이 널리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일단의 개인들이 그 사상을 사회 전체로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람시가 살던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인들은 대부분 소도시나 농촌에서 살았다. 당시 유력한 사상을 전파한 사람들은 게 스스로 맞췄다.” 모든 당원은 작업장·학교·지역사회 등 자신의 “주위 환경” 안에서 지도자가 돼야 한다.

1937년 질병과 파시스트 정권의 학대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람시의 궁극 목표는 여전히 혁명이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언론이 우리 삶을 속속들이 좌우하는 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사상이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획득하려면 국가나 집권당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런 네트워크가 그런 사상을 상징이나 술집이나 가정의 일상 생활 속으로 옮길 수 있다.

토니 블레어가 직면한 한 가지 문제는 그의 당의 뿌리가 시들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이 곧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노동당 뿌리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하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지역사회에서 대한 사상을 주창할 사람들을 걸질시킬 네트워크가 부족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람시는 이렇게 주장했다. “대중은 가장 광범한 의미에서 스스로 조직하지 않고는 눈에 띄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독립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지식인들, 즉 조직자들과 지도자들이 없는 조직은 없다. 다시 말해, 이론—실천 관계의 이론 측면이 없는 조직은 없다는 것은 사상을 개념적·철학적으로 정교화하는 일종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지식인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힘들고 모순으로 가득 찬 오랜 과정, 전진과 후

퇴, 몽치고 흠어짐을 거듭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충성심은 흔히 심각한 시험을 거친다.”

감옥에서 검열을 피해 글을 써야 했던 그람시는 “혁명정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유기적 지식인들”이라고 표현했다.

유기적 지식인

운동의 지도라는 생각은 자연히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블레어나 스탈린의 지도 개념, 즉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지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는 어떤 투쟁에도 있기 마련이다. 마치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에 서 누군가가 바스티유로 진격하자고 호소했듯이, 누군가는 일어서서 “우리는 피캣라인을 지켜야 한다[파업 참가자와 파괴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람시는 이런 종류의 지도는 “어떤 과학적·추상적·이론적 공식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았다”고 썼다. “그것 [바람직한 지도]은 정치, 현실의 행동을 이론적 논문과 혼동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현실의 사람들에게 스스로 맞췄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능동적인 대중 전체에게 유기적 지도를 제공하는 문제다. 이 지도는 낮은 도식들을 따르지 말고 혁신해야 한다.”

그람시는 노동계급의 자생적 반란이 우선 중요하다고 봤다. 그리고 그는 “자생성”과 “의식적 지도”의 통일을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제1차세계대전 후 그람시 자신이 경험한 토리노 노동자들의 반란과 공장 평의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구 사회에서 노동계급은 의회 민주주의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긴다. 여

기에는 상식이 깃들어 있다. 의회 민주주의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이런저런 독재보다 낫고, 따라서 이는 우리가 정취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한다면,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를 깨닫고 이를 뛰어넘어 새롭고 더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람시의 주변 관심사는 서유럽 노동계급이 혁명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페리 앤더슨은 1977년 그람시를 다룬 주요 논문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윤배반”이라는 제목의 글로 〈뉴 레프트 리뷰〉지에 실렸다—〈맛볼〉 편집지에서 이렇게 결론지었다. “공동전선—레닌이 죽기 전에 서유럽 노동계급 운동에 충고한 마지막 전략이자 육종의 그람시의 첫번째 관심사—의 문제의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긴급한 과제는 권력 장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노동계급을 설득하는 것이다.”

공동전선

혁명가들은 이런 혁명적 위기 전까지는 소수임을 인식한 채 노동계급과 피억압 집단 사이에서 오랫동안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활동을 해야 한다.

이 말은 혁명가들이 혁명적이지 않은 노동자들과 그들의 대표들과 함께 활동하면서도 혁명적 사상과 전략을 가장 명료하게 표명하며 대화를 나누는 비(非)종파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공장 평의회나 러시아에서 소비에트라고 부른 것이 이 점을 가장 고차원적으로 보여 준다.

우리가 “기동전”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기 전까지 우리는 사회주의 사상이 운동에서 득세하도록 “진지전”을 벌이며 “진지전”에서 승리해야 한다.

버지니아공대 참사는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우파와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다. “극히 비뚤어진 과대망상자가 벌인 참극”(《중앙일보》)이라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새롭지 않다. 8년 전 컬럼바인 고교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우파들은 똑같은 얘기를 떠들었다. 그 때도 폭력적 비디오와 게임이 문제라는 얘기가 유행이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조승희 씨가 남긴 동영상은 기껏해야 그가 “정신착란”과 “과대망상”에 빠져 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조 씨가 남긴 동영상의 내용이 다소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동영상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다.

동영상에서 그는 어눌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나”의 끔찍한 “고통”과 “너희들”(“속물들”, “기만적 허풍쟁이들”)의 “방탕”을 극명하게 대조한다.

“너희들은 나를 궁지로 몰아 넣었고 … 내 심장을 파괴했고, 내 영혼을 유린했고, 내 양심을 불태웠다. … [반면] 너희들은 평생 동안 단 1온스의 고통도 느껴본 적이 없다. … 너희들은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동영상을 압도하는 정서는 그가 겪었던 소외와 억압에 대한 사무치는 증오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나”와 “너희들” 사이의 [계급] 분단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놓여 있다. 그는 “메르세데스[-벤츠]”, “금목걸이”, “코냐”, “펀드”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쾌락주의적 욕망”을 거세게 비난한다.

“자기 잘못을 세상 탓으로” 돌리는 “피해망상”일 뿐이라는 우파들의 주장과 달리 이런 조 씨의 증오와 분노는 바로 자신이 사는 사회 — 자본주의 사회 — 에서 겪은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했다.

방탕

조 씨는 8살 무렵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의 부모는 “세탁소에서 일 자리를 얻었고 매우 장시간 일했다. … 물론 목표는 그들 자신의 가게를 여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승태 씨[조승희 씨의 아버지]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압착 담당 직원으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뉴욕타임스》 4월 22일치)

두 부부가 “일벌레”처럼 악착같이 산 덕분에 그들은 워싱턴 DC 부근의 중산층 거주 지역(센터빌)에 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급 처지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또,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가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물론 가족들끼리도 여유있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조 씨는 학교 생활도 순탄치 않았던 듯하다.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아마도 수줍은 성격과 어눌한 말투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과 놀림을 당했다.”

조 씨를 가르쳤던 영문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게 너무 외롭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부정적이고 자포자기한 상태여서 그와 얘기할 때면 마치 구멍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부자집 아이들”과 함께 대학을 다니며 계급 분단에 대한 자각은 아마도 더 분명해졌을 것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건 몇 년 전 조 씨의 아버지는 몸이 아파 세탁소 일을 그만뒀야 했고, 이 때문에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

조 씨의 경험과 “고통”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이 겪은 보편적 경험이라는 더 넓은 맥락과 맞닿아 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강화됐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신경제’ 호황은 상당 부분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한 착취율 증대에 힘입은 바 컸다.

구조조정과 시장주의 확대는 억압과 소외의 강화를 수반했다. 노동자들은 위축됐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

에 팬츠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더 극심한 경쟁에 내몰렸다.

미국대학건강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의 8.5퍼센트가 자살 시도를 심각하게 고려한 경험이 있고 15퍼센트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이는 2000년 10퍼센트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이 점에서 조 씨가 저지른 사건이 재미한인(또는 이주자) 사회의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상당수 언론들의 보도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 씨의 동영상에는 그가 이주자로서 겪었던 특수한 억압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다수 미국 언론들도 조 씨 사건은 “한국과는 무관한 미국의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학교 또는 직장 내 총기 사건의 압도 다수는 백인들이 저질렀다. 이전의 다른 총기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조 씨 사건의 핵심도 계급 사회가 낳은 억압과 소외이다.

전쟁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군사주의적 개입을 강화했다. 이는 미국 국내의 극단적 계급 불평등과 함께,

이 분노와 슬픔의 진정한 책임은 조승희를 ‘괴물’로 만든 체제에 있다

유독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 — 1996년 이후 전 세계에서 일어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이다.

1990년대 말 미국은 보스니아와 코소보에서 전쟁을 벌였고, 2001년 9·11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점령했다. 지금 미국은 이란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제국주의 전쟁이 부추긴 군사주의적 문화의 만연은 절망과 증오로 가득찬 — 그러나 동시에 대체로 고립되고 매우 보수적인 의식을 지닌 — 개인들이 매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증오를 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디펜던트〉의 지적처럼, “미국 문화가 개인적 문제에서 지정학적 문제까지 모든 갈등을 폭력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낡고 오래된 메시지를 되풀이하는 한, 이번 [참사 같은] 일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제국주의 전쟁은 국내에서도 억압과 소외를 강화하는 법이다.

물론 조 씨가 느낀 좌절감과 분노만으로 대량 살인이라는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 씨와 비슷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지만 조 씨와 같은 극단적 행동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 씨가 저지른 참사는 자본주의 사회가 조장하는 억압과 소외가 얼마나 왜곡된 방식으로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끔찍한 징후이다.

억압과 소외, 착취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중 저항과 그와 연관된 진정한 대안만이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절망과 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김용민

※ 관련 후속 기사(총기규제 논란 등은 곧 <맞불>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조지 부시는 이라크에서 매일같이 ‘총기 난사’를 능가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암울한 미래에 발을 들이려는 ‘미래구상’

지난 17일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과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이 통합해 신당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방향이 좀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국민운동’은 ‘미래구상’보다 분명하게 반한나라당 전선을 표방한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창립 취지로 “뉴라이트 등 냉전수구 세력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을 들었다. 이를 위해 “평화개혁세력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단체의 발기인 명단에는 김근태 계열 인사들과 열우당 의원 민병두 등 여권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미래구상’과 ‘국민운동’ 통합이 범여권 통합의 기폭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일부 개혁 사기꾼들은 ‘미래구상’을 발판 삼아 재생을 노리고 있다.

이 점에서 ‘미래구상’이 NGO들 사이에서 가진 영향력을 진보진영 단결에 사용하기보다는 범여권 개혁파 결집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때문에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구상은 혼란과 모순으로 뒤죽박죽이다.

‘미래구상’의 왼쪽 얼굴이라 할 만한 지금중 사무총장은 “[‘미래구상’과 ‘국민운동’이 만들]신당의 정체성이 한미FTA 반대”이고 “정책과 노선으로만 보면 민주노동당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최윤 ‘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은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한 반신자유주의 전선이라는 것은 없다”며 사실상 범여권 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두었다.

이 때문에 ‘미래구상’이 제시한 연합의 주요 기준과 연합하려는 세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모순이 나타난다. 당장 “반신자유주의 대표 요구”(지금중 사무총장)인 한미FTA 반대만 놓고 봐도 그렇다. 한명숙·정운찬·문국현은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는다. 문국현은 “마치 농

사학법 개악 야합 시도에 항의하는 교사들 - 열우당 개혁파, ‘배신은 계속된다’

업을 포기한 듯 보인 잘못은 있지만 한미FTA를 하지 않으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은 한미FTA 타결을 “균형외교, 실리외교의 결실”이라고 찬양한다.

또, ‘미래구상’의 일부 인사들은 3불정책 유지를 중요한 선거연합의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정운찬은 대표적 3불정책 폐지론자다.

혼란과 모순

물론 천정배와 김근태는 한미FTA에 반대해 단식까지 했다. 한미FTA 반대 운동에서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가 곧 ‘신자유주의 반대’는 아니다.

손호철 교수의 지적처럼 “노동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찬성하는 반신자유주의 세력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김근태와 천정배는 비정규직 악법의 통과를

주도했거나 지지했는데 무엇보다 지금도 이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라크·레바논 파병 등 반전·평화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파병을 지지·방조해 왔다.

천정배와 김근태가 단지 개인이 아닌 조직된 세력을 대표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김근태의 민평련과 천정배의 민생정치모임에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개혁 사기꾼들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민평련 소속 이목희와 우원식은 비정규직 악법 통과를 주도한 자들이다. 장영달은 이번 사학법 개악 야합의 주역이기도 하다.

이런 자들과 ‘정책 연대’를 맺은 천정배 계열도 마찬가지다. 현대차 CEO 출신 이계안은 비정규직 악법에 찬성했고, 최재천은 레바논 파병에 찬성했다. 더구나 범여권 ‘개혁파’들은 여전히 범여권 ‘보수파’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최재천은 “선거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중도와 지역을 외곽으로 하는 [범여권]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런 자들과의 무원칙한 연합은 진보진영의 단결과 전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에게 부르주아 개혁파 비판을 자제하고 독자적 요구를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래구상’이 표방하는 ‘수구·양극화 세력 반대’를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반전·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의 핵심 동력을 약화·마비시킬 것이다.

‘미래구상’은 범여권 개혁파들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래구상’의 전략이 이들에게서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끌려갈 수도 있다.

손혁재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범여권 통합이 정권 장악을 위한 이합집산 처럼 보이는 “립스틱 바른 돼지”가 돼선 안 된다고 했는데, ‘미래구상’이 바로 그 립스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구상을 추수하다가 함께 수렁에 빠지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대신 ‘미래구상’의 모순을 비판하며 이들이 진정한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범여권 개혁파와 민주노동당 사이에서 동요하는 NGO들과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서민 대중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미FTA 반대 운동을 둘러싼 상황은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겨레21> 655호는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기회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김근태·천정배가 단식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FTA 반대의 정치적 구심점[이 아니기 때문]”에 “범여권 지지층에 있는 진보층들이 FTA를 계기로 떨어져나와, 민주노동당 쪽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 단결을 주도해 이 가능성을 현실화해야 한다.

한규환

대학 맑스주의 포럼

건국대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5월 3일(목) 오후 6시 30분
연사: 장호중(주간 <빛불> 기자)
장소: 건국대 상허관 108호
문의: 010-6636-5349

이대 신자유주의를 넘어-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민중의 저항

5월 2일(수) 오후 6시 30분
연사: 김용욱(주간 <빛불> 기자)
문의: 010-9880-9193

시립대 신자유주의를 넘어-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민중의 저항

5월 2일(수) 오후 7시
연사: 이수현(주간 <빛불> 기자,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 혁명>의 역자)
장소: 건설공학관 206호
문의: 011-9347-1075

성균관대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5월 3일(목) 오후 6시 30분
문의: 010-6421-4017

지역사회포럼

부산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5월 4일(금) 오후 8시
연사: 이정구(경상대 경제학과 강사)
장소: 토즈(서면 마리포사 4층)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552-7696

인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5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연사: 김용욱(주간 <빛불> 기자)
장소: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4층 교육실
문의: 010-3083-5508

<빛불> 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 02) 2271-2395으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기업은행 066-042771-01-012
농협 100037-56-119794
신한은행 308-12-498840
우리은행 1002-130-549338
우체국 011726-02-129945
하나은행 197-910005-87207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

에서 CMS 계좌이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

은 매월 25일에 인출됩니

다.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

다.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면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 · 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 · 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 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소식 | 보고

파업 1백 일을 넘긴 〈시사저널〉 노동자들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삼성 비판 기사를 삭제한 것에 맞서 온 〈시사저널〉 기자들의 파업이 지난 4월 20일로 1백 일을 맞이했다. 파업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편집권의 제도적 독립’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94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시사저널의 정체성은 많이 팔리는 것이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사측은 전체 24명의 기자들 중 17명에게 징계를 내렸고,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외부기고로 60퍼센트 이상을 채우며 ‘짜퉁 시사저널’을 발행하고 있다.

조잡하게 만들어진 ‘짜퉁’은 영국 BBC 기사를 표절하고 《월간조선》 기사를 사실 확인도 않고 그대로 실은 오보 투성이였다. 이처럼 언론사로서 독자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포기한 사측은 기자들의 파업을 지지한 독자 6명을 고소하기까지 했다!

4월 20일 파업 1백 일 기념 집회

한편 파업의 발단을 제공한 삼성은 ‘짜퉁 시사저널’에 2차례의 뒷면 표지 광고를 포함해 가장 많은 광고를 게재

독자편지

대중의 의식은 보수화하는가?

박노자 교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해” 지배자들의 위선에 맞서 지난 하고도 날카로운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여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한 투쟁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런데 지난 4월 18일치 〈한겨레〉칼럼에서 박노자 교수는 금융노조의 창구영업 시간 단축 요구를 비난하는 대중의 반응을 예로 들며 “요즘 국내 상황을 보노라면 ‘대중독재’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대중이 “자신의 실질적인 계급적 이익을 각성하지 못한 채 자본 독재에 지지를 보내는” 것을 보며 박노자 교수는 “대중의 상당 부분이 우향우하고 있다”는 비관적 결론을 내렸다.

물론 상당수 사람들이 자신의 불만을 당장 저항으로 표출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다른 노동자들을 밟고 올라서는 길을 택하거나 이번 금융노조의 사례처럼 자본의 이간질에 부화뇌동해 특정 노동자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 독재’를 지지해서가 아니다. 뿌리 깊은 소외와 불

만 · 좌절이 일시적으로 엉뚱한 데로 쏠린 것일 뿐이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나름으로 해석하지 지배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내면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은 “모순적”이다. 이 모순 때문에 사람들은 지배자들의 지배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저항하기도 한다. 박노자 교수도 지적한 바 있듯이, 지배자들의 민족주의나 종교 이데올로기가 의도치 않게 민중의 저항 이데올로기로 채택되는 역설이 대표적이다.

대중독재론

박노자 교수도 인정했듯이 이런 모순은 임지현 교수가 주장하는 ‘대중독재론’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임지현 교수가 주로 얘기하는 박정희 시대조차도 그렇다. ‘대중독재론’이 맞다면 예를 들어 ‘공장 새마을 운동’의 모범으로 선정된 인천제철 노동자들이 격렬한 파업을 일으켜 박정희 정권 말기 노동쟁의 물결을 촉발하는 일

해 사측의 후원자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현재 〈시사저널〉 노동조합은 3월 말까지 진행된 집중 협상이 사측의 성의없는 태도로 결렬되자, 더욱 강경한 노선의 2기 집행부를 구성해 ‘전원 아니면 아무도 돌아가지 않는다’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시사저널〉 고재열 기자는 파업중에 KBS ‘퀴즈 대한민국’에 도전해서 우승한 후 받은 상금 중 1천만 원을 파업 기금으로 내기도 했다. 그는 우승 소감에서 “저는 〈시사저널〉 파업 기자입니다. 기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집권입니다. 우리는 기자로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자본의 언론 통제에 맞서는 〈시사저널〉 기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계속되어야 한다.

김중환

등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박노자 교수가 다시 ‘대중독재론’에 기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현실에서는 박노자 교수가 언급한 금융노조의 사례에 반하는 증거들도 많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2002년 발전소 사유화에 맞서 발전노조가 파업을 벌였을 때 국민의 86퍼센트가 발전노조의 주장을 지지하고 보내 발전소 매각에 반대했다.(한길리서치 조사) 국민의 80퍼센트가 ‘개발주의’에 반대해 새만금 간척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2006년 한길리서치 조사) 또,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KTX 승무원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라크 파병 한국군 철군을 요구하는 국민이 90퍼센트를 넘는다. 양극화 속에서 대중 의식의 급진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대중운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의 성장이 이것을 보여 준다.

이규형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자!

‘열린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용돈연금화’ 개악 때문에 노동자 · 서민 들은 노후 설계는커녕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노후를 보내게 됐다. 그런데 이번 연금제도 개악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민주노동당의 처신은 노동자 · 서민 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물론 개혁안을 일부라도 관철시키려 한 민주노동당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우물에서 숯농 찾는 격’이나 다름없다.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을 하고자 했다면, 국민연금 개악에만 관심 있는 ‘열린 한나라당’과의 공조가 아니라 노동자 · 서민 들과의 공조를 고민하고 행동했어야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부터라도 ‘열린 한나라당’의 ‘용돈연금’에 반대하는 투

쟁에 나서야 한다. ‘열린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개악을 ‘모범’삼아 공무원연금을 하향 평준화 시키려 한다.(〈조선일보〉 4월 21일치 사설) 정부와 ‘열린 한나라당’의 공무원연금 하향 평준화 공격에 반대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김태연

정성진의
맑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최근 사회적 자본 이론, 사회적 투자국가론이 진보진영 일각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 중에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 사회적 투자국가 수립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노무현도 지난 1월 신년연설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등의 용어로 채운 바 있다. 노무현은 “신뢰·통합 등 사회적 자본 투자가 충실해야 지속 발전이 가능”하고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뢰가 바로 선 사회, 통합이 잘 되는 사회”,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인 “사회투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착취적 자본,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투자와 다른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 투자라는 개념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은 원래 문화자본론을 주장한 부르디외(P. Bourdieu)가 처음 비유적으로 도입한 개념인데,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한 것은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퍼트넘(R. Putnam)이다.

퍼트넘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 신용, 도덕적 의무감, 사회적 연결망,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다. 사회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경제 발전에는 물적 자본, 경제적 자본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큰 구실을 한다.

예컨대 신뢰는 경제 주체들 간의 필수적 규범으로 기능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퍼트넘은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쇠퇴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 같은 현상에서 보듯이 공동체 문화가 와해돼 사회적 자본이 고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하지만 퍼트넘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이 사건이 미국에서 ‘애국주의’를 고조시켜 사회적 자본을 재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이나 최근 중국이 다른 제3세계 나라들과 달리 고도 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나라에 고유한 교육열이나, 화교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 덕분이라고 주장된다. 한국과 중국의 고도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경제학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핵심 요소로 하는 ‘발전의 사회학’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사회적 자본 이론은 지난 세기 말부터 세계은행이 적극 수용한다. 세계은행은 제3세계의 빈곤과 저개발의 원인을 이들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의 부족에서 찾고,

제3세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한 사회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이 점에서 사회적 자본 이론은 세계은행과 같은 제국주의 기구들이 제3세계의 노동조합과 NGO를 비롯한 사회운동들을 각종 정책 토론과 발전 프로젝트로 끌어들여 이들을 체제에 위협적이지 않은 세력으로 편입하기 위한 도구임이 드러난다.

즉, 사회적 자본 이론은 신자유주의를 대신해 21세기 세계 자본가 계급의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로 떠오르고 있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Post Washington Consensus: 대표적 주창자는 전직 세계은행 부총재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이다)의 핵심 이론이다.

이른바 ‘시장의 효율적 작동’,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착취와 축적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하이에크 같은 원조 신자유주의자들이 신봉했던 자유시장 만능주의가 아니라, ‘조절된 시장’의 구축 및 이를 위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을 개선·확충하는 정책들은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개선해서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 이론은 자본주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면서도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긍정한다. 사회적 자본 이론은 신자유주의의 시장 근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사회적’·‘정치적’ 등의 미사여구로 분식한 것일 뿐이며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근본 원리에 도전하지 않는다. 사회적 자본 이론의 주요 개념인 ‘네트워크’ 개념 역시 신자유주의 신고전파 경제학과 쉽게 조화될 수 있다.

진보진영은 시애틀 투쟁에서 분출한 ‘반자본주의 정서’를 바탕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 구조와 정면 대결하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시장 경제학을 비판하려는 케인스주의자들이 사회적 자본 이론을 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적 효율성을 옹호하면서도 단지 그것의 ‘불완전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케인스주의자들에게 사회적 자본 이론은 이러한 ‘불완전성’을 사회적 측면에서 보충해 줄 수 있는 도구로 간주된다.

한 마디로 사회적 자본 이론은 ‘좌파 신자유주의자’ 노무현에게나 어울리는 신장개업한 신자유주의 수사학일 뿐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일부 진보진영이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적 투자는 투기적 자본이나 투기적·반인간적 투자보다는 바람직한 것이니, 반신자유주의 차원에서 이들 정책 자체는 비판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일 것이다.

그 경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의 포섭은 필연적이다. 사실 사회적 자본 이론 자체가 진보진영의 담론과 운동을 교란·분열시켜 체제 내로 통합시키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서 의도된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좌파 신자유주의

진보진영은 마르크스의 자본 개념을 근본에서 부정하는 사회적 자본 이론을 전면 폐기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 개념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은 ‘시장사회주의’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형용모순의 사이비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 개념은 자본 개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나머지, 임금노동의 착취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로서 역사특수적인 자본 개념을 제거한다.

사회적 자본 개념은 경제적 형태의 자본(산업자본·상업자본·금융자본 등)이

사회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개념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산업자본·상업자본·금융자본과 같은 ‘경제적 자본’은 이들을 지탱해 주는 사유재산 제도나 자본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자본 이론은 협의의 ‘경제적 자본’이 비사회적이라고 전제함으로써, ‘사회적인 것’과 자본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킨다. 반면, 사회적 자본 이론은 신용·신뢰·정직 등을 무차별적으로 자본으로 간주함으로써, 자본 개념에 고유한 경제적·계급적 내용을 제거한다.

그러나 자본 개념에 핵심적인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구적 운동이라는 환원될 수 없는 경제적 내용이다. 사회적 자본 이론처럼 모든 사회적 관계를 무차별적으로 자본으로 간주할 경우, 본질적으로 착취적인 위계적 계급 관계로서 자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 자본 이론은 자본으로 개념화할 수 없는 ‘사회적인 것’을 부당하게 자본화할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 개념인 자본에서 사회적 내용을 박탈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자본 이론은 사회가 아니라 자본에 봉사한다.

최근 세계 지배계급의 담론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 자본 이론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유주의’(노무현이 얼마 전 ‘좌파적 신자유주의’라고 부른 것), 즉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로 이동했다. 자유시장 지상주의, 시장 근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이미 한물갔다. 세계 자본가 계급들이 신자유주의 카드를 내리고, 그 대신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카드를 흔들고 있는데, 진보진영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반신자유주의’의 문제설정에 갇혀 있다면, 뒷북칠 우려가 있다. 진보진영이 신자유주의가 현 체제의 핵심 문제라고 비판한다면, 노무현을 비롯한 지배계급은 자신들은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을 접었으며 사회적 자본 확충과 사회적 투자국가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고 응수할 수 있다.

진보진영은 최근 유행하는 사회적 자본 이론이나 사회적 투자국가론,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등 케인스주의의 각종 변종들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적 본질을 인식하고, 단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항대립적 반대를 넘어서 1999년 시애틀 투쟁에서 분출했던 ‘반자본주의 정서’에 기초하여 ‘21세기 사회주의’를 구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성진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마르크스와 한국경제》,
《마르크스와 트로츠키》의 저자이고,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역자이다.

비정규직 확대 시행령을 저지하라

4월 20일 노무현 정부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지난 연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하는 악법임을 뚜렷이 보여 준다.

‘시행령’은 기간제로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직종을 16개로 늘렸다. 박사 학위 소지자 중 해당 분야 종사자, 시간 강사와 연구원, 정부가 만든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 등은 모두 2년 넘게 일해도 정규직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파견제 허용 직종도 1백38개에서 1백87개로 50여 개나 늘렸다. 무엇보다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종사자’도 포함시켜 제조업까지 파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한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반영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다.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 해고, 외

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재계가 한통속으로 비정규직 확대에 혈안인 가운데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응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들러리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연말 비정규직 악법 통과 이후 노사정위 불참과 법안의 재개정 투쟁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시행령 마련을 위한 노사정 협의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비공개로 말이다.

악법 폐기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해 놓고는, 악법 수용을 전제로 한 시행령 작성 논의에 참가한 것은 심각한 모순이요, 투쟁 대열을 혼란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짜리고, 불이익 당하고, 아웃소싱 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 속에 노동자들이 처절한 투쟁을 벌이는 동안, 지도부

는 시행령 개정 논의에 참가해 비정규직 확산 시행령에 들러리를 선 것이다.

이석행 지도부는 나아가 비정규직 악법에 따라 설치된 ‘차별시정위원회’ 참가도 결정했다. “차별시정위원회의 친자본 편향을 방지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말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참가하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 TFT(태스크포스 팀)에서도 정부는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필수유지 업무를 확대하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직권중재제도의 부활과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 TFT에서도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발목을 잡아놓고 시간만 끌려는 듯하다. 특수고용직 노동3권 요구는 갈수록 멀어져가고 있다.

그런데도 “앞으로 중앙 차원의 파업은 자제하고 어떤 경우라도 대화하겠다”는 이석행 지도부의 태도에 <조선일보>는 “옳은 인식”이라며 좋아했다.

노조에게 교섭은 필요하다. 그러나 교섭

에 매달리며 투쟁 건설을 회피하면 계속 뒤통수만 맞을 것이다. 더구나 악법 수용을 전제하는 교섭 참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행 지도부는 비정규직 악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라는 비정규직 투사들의 호소에 전면적인 투쟁 건설로 답해야 한다. 고립 분산적으로 진행중인 투쟁들을 집중시켜 전면적인 악법 폐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메이데이 집회는 수도 서울에서 이 같은 투쟁을 결의하는 전국 집중 투쟁의 장이 돼야 한다.

정종남

제11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

일시 : 5월 1일 오후 2시
장소 : 대학로
※ 집회 후 서울시청 광장으로 행진 예정

그칠 줄 모르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조송희

이른바 ‘일심회’ 관련 구속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 사흘 만에 경찰은 <통일뉴스> 사진작가 이시우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미국 핵잠수함을 촬영해 보도하고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시우 씨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의 공식 취재 지원을 받아 기사를 작성했고 미군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핵잠수함 사진을 다 운반아 자료로 올린 적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시우 씨를 연행한 바로 다음날 이른바 ‘학생운동’과 관련된 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 혐의가 있다며 이 아무개 씨를 연행했고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활동가 송 아무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여름 구속됐다 올해 초에 풀려난 ‘민권연구소’ 연구원 최희정 씨 수사 과정에서부터 ‘한총련 배후 조직’ 운운하며 조직 사건을 터뜨릴 준비를 해 왔다.

검찰은 당시 최희정 씨에게 40~50명의 활동가 채증 사진을 보여 주며 “한총련 배후 조직표”를 그리라고 추궁했다.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동료를 팔아 넘기라고 협박한 군 사독재 시절 검찰과 똑같은 짓을 한 것이다.

검찰의 탄압은 이 아무개 씨 구속에서

전교조처럼 싸워야 한다

최근 법원의 ‘일심회’ 판결은, 분파주의에 눈이 멀어公安 검찰의 공소장을 기정 사실화하며 “간첩단은 방어할 수 없”다고 말한 일부 민주노동당 그룹들이 왜 잘못이었는지 분명히 보여 준다.

법원은 ‘일심회’가 ‘간첩단’은 고사하고 ‘이적단체’로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른바 ‘일심회’ 구속자들이 ‘북한에 넘겼다’는 자료도 절반 이상을 국가 기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치지 않고 더 확대될지 모른다. 최희정 씨를 변호했던 김승교 변호사는 당시 “14년 한총련사에 전무후무한 최대 조작 사건이 될 것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公安 당국은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러 한미 FTA 반대 투쟁 등의 확산을 차단하려 한

사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NL계열이든 PD계열이든 마녀사냥에 정면으로 맞서길 꺼렸다.

당 최고위는 “유감” 성명을 발표하며 최기영 동지를 면직시켰다. <조선일보>는 이런 태도를 “진일보”라고 반겼다.

진보진영 주요 부분의 이런 기회주의적 대응 때문에 법원은 검찰 기소 내용의 상당 부분을 무죄 판결하고도 거리낌 없이 중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듯하다.

반면, 전교조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맹규·최화섭 두 교사 방어 캠페인을 매우 효과적으로 조직했다.

전교조는 두 교사 구속은 곧 전교조 탄

다. 또, 대선을 앞두고 계속되는 기성 정치권 위기의 속죄양을 찾으려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에 맞서는 진지한 투쟁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에 반대하고 탄압받는 사람들을 방어하는 투쟁이 시급히 조직돼야 한다.

압이라고 올바르게 규정하고 마녀사냥에 반대하는 투쟁을 신속하게 조직했다. 두 교사 석방 촉구 선언에 교사 1만 5천 명을 동참시켰고, 학생과 학부모의 탄원서를 조직했고 해외 교원단체들의 한국 정부 규탄 성명서들을 조직했다.

또한, 전교조는 2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에 교사 3백여 명을 참가시켜 정부를 규탄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지난 4월 16일 법원은 결국 두 교사를 보석으로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모두 전교조의 이런 투쟁에서 배워야 한다.